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성혜진 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9058-0581 (lywchosim@naver.com)
----	------------------------	-----	--

민주, 노동건강정책포럼과 정책협약 체결 ...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구현 나선다 민주당 선대위 - 노동건강정책포럼 정책협약식

- 5월 29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국가 책임 강화, 직업병 예방제도 혁신, 사회보장 확충 등 추진
- 민주 “온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 안전 퇴근 보장해야”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위원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노동건강정책포럼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의 김영훈 본부장, 이용우 부분부장, 신동호 노동희망실천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직업병 예방 제도의 혁신과 산업보건기반 확대 ▲아프면 쉴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확충 ▲지역사회 기반 직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건강정책포럼 소속 윤조덕 박사는 “노동자 안전 건강 보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개발 사업이라 노동부 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협약을 토대로 함께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협약을 체결한 김현주 포럼 대표는 “오늘 출근한 사람이 오늘 퇴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며 “일터에서 죽는 사람들은 노동 취약계층이 많은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 협약이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포럼 소속 천지선 변호사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모든 산재 취약 계층에게 지역 기반의 직업 안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모든 다양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827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며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기 위해서는 온 국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화답했다.

이용우 노동본부 부분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3년 동안 노동 탄압 입장을 일관했다” 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 후진적 재해 극복, 신속한 산재 보상 등 노동 안전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협약이행 의지를 밝혔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붙임 2. 협약식 현장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 노동건강정책포럼 정책 협약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비전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은 산재예방보상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정부 산재예방보상 행정조직의 강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 산재연구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을 통해 구조적 예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과로사 없는 건강한 일터 조성

과로사 방지법 제정과 과로자살 예방대책 강화, 직종별 과로 기준 마련, 고위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3. 직업병 예방 제도의 혁신과 산업보건기반 확대

의료현장 기반의 국가 직업병 진단·보고 시스템 구축, 유해작업 평가 및 발암물질 노출자 건강관리체계 개선 등 직업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4. 직업병 판정의 신속성 확보와 생계보장 실현

직업병 추정의 원칙 확대, 업무상 질병 판정체계의 개선, 처리 지연에 따른 고통 분담 제도화, 선보장-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생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5. 아프면 쉴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확충

공백 없는 치료와 회복권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6.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실현

여성에게 특화된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마련, 임신·출산 노동자 보호, 태아 산재 제도 개선 등 성인지적 산재예방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기반 직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역 및 권역별 직업안전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다부처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등 산재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2025.5.29



노동건강정책포럼
대표 김 현 주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